

最近의 韓·美 經濟協力關係

吳 定 圭*

1. 韓·美 經濟關係의 概觀

최근 韓·美 經濟協力關係는 양국간 무역수지가 대체로 균형을 유지해온 바탕위에 쌍무간 및 다자간 협의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7년 9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되어온 對美 貿易收支는 '91년이래 균형상태를 보여 작년에는 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의 대미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에 크게 떨어진 데 기인하는바, 이로 인해 우리의 미국시장점유율은 '87년 20.8%에서 '93년 18.5%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의 대폭 감소로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자연스럽게 완화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작년에는 양국 新政府의 출범과 함께 2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쌍

무간의 통상현안 해결은 물론, APEC, UR 등 다자간 협의과정을 통해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자유무역질서의 형성에 양국이 적극 협조하였다.

〈표 1〉 對美 交易現況

(通關基準, 億달러, %)

	美國과의 輸出入			各國의 對美市場占有率 推移			
	輸出	輸入	收支	韓國	日本	中國	台灣
1987	183.1	87.6	95.5	4.4	20.8	1.6	6.0
1989	206.4	159.1	47.3	4.2	19.8	2.5	5.1
1991	185.6	188.9	△3.4	3.5	18.8	3.9	4.7
1992	180.9	182.9	△2.0	3.1	18.3	4.8	4.6
1993	181.4	179.3	2.11	2.9	18.5	5.4	4.3

주: 미국 통계로는 23억달러 흑자(일본은 593억달러, 중국 228억달러, 대만 89억달러의 대미 흑자시현)

한·미간의 법, 제도, 관행 등의 괴리에서 발생될 수 있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정상의 합의로 설치된 企業環境改善方案(PEI)과 經濟協力對話機構(DEC)를 통해 점진적·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기조를 이루면서 각종 현안별로 양국간 무역

* 經濟企劃院 對外經濟局 待遇 書記官

실무위원회, 과학기술포럼, 금융정책회담, 통신회담 등 각종 실무회담이 여러차례 개최되었다. 또한 '93년 7월 「금융자유화·국제화 청사진(Blueprint)」의 제시, '94년 6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대책 마련, OECD 가입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혁 등 우리 경제의 개방화·국제화와 관련된 제반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양국간 원만한 통상관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측은 우리의 대외정책방향이 國際化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아세안 등 경쟁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속도가 늦고 制限的인 임을 지적하면서 미국기업의 한국과의 무역, 투자활동에서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외국인 投資環境改善, 金融規制緩和, 知的財産權保護 강화 등 국제수준으로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94년에 들어서는 UR의 국별이행계획서(C/S) 검증과정에서 양국간 이견이 제기되고 대구머리 수입문제 등 장기간 미해결과제의 지속, 수입냉동소세지 통관보류, 수입자동차 시장접근제한 등과 관련 한·미간 통상관계를 악화시킬 요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2.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

「포스트냉전」의 물결을 타고 '93년 1월 출범한 미 클린턴 행정부의 通商政策은 이전 공화당 정부와 선명하게 구별된다. 지난 12년간에 걸쳐 부시-레이건으로 이어졌던 공화당 행정부를 안보우선의 대외지향체제로 성격 짓는다면 클린턴 행정부는 군사안보가 아닌 통상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미국 경제제건이라는 대내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클린턴 행

정부는 통상정책에 있어 부시-레이건 행정부가 비교적 자유무역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자유무역의 기초아래 사안에 따라 관리무역의 성격을 배합한 「클린턴식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통상정책에 대한 각론에서는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시장이 열려있는 만큼 자국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식으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공정한 무역관행의 확립과 시장접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체적 판단으로 不公正貿易慣行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강력한 通商壓力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안보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는 미국의 통상전략은 「輸出增大=經濟成長=美國經濟再建」의 등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선택했고 이는 '93년 9월 미 상무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수출촉진조정위원회가 6개월간에 걸친 작업끝에 내놓은 「국가수출전략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장래는 미국이 해외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제, 현재 7천억달러 규모에 머물고 있는 수출규모를 향후 10년안에 1조달러로 확대한다는 것이 중요내용이다. 수출 1조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태평양 연안국, 동구, 러시아, 중국 등을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 현재의 내수의존 경제체제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정부의 모든 가용재원을 수출전선에 투입한다는 매우 야심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상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은 다각적인 협상채널을 준비하고 있다. UR타결과 WTO체제 출범을 계기로 多者間 自由貿易主義를 정착시키고

NAFTA의 결성과 같은 地域主義 결성을 통해 EU 등을 견제하는 동시에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는 雙務主義的 통상협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불공정 교역국에 대해서는 일방적 통상보복수단도 불사한다는 다양한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쌍무협상에서의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89~9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수퍼 301조를 '94년 2월 행정명령으로 부활시켰다. 미국은 앞으로도 자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해 교역상대국에 대해서 자신들에 유리한 교역관행을 준수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雙務間 經濟協力の 深化

(1) 制度的 改善을 위한 協議

최근 몇년간 한·미 통상관계 진행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항은 양국 통상현안들을 공동문제 해결차원에서 단계적이고 구조적인 經濟協力體制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다. '92년 1월부터 '93년 6월까지 추진되었던 企業環境改善方案(PEI: Presidents Economic Initiative)과 '93년 7월 구성된 經濟協力對話機構(DEC: 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가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접근방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별 통상현안에 대한 지엽적 해결에 주력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 문제해결의 시각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들 경제협력체제는 한·미 양국간 이해관계의 균형있는 반영이라든지 합의사항을 구속력없이 각자 이행한다는 원칙이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다.

PEI는 '92년 1월 한·미 정상간의 합의로 경제분야에 있어 양국간 긴밀하고 광범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함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는 양국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함과 동시에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을 갖고 추진되었다.

PEI에서는 基準, 通關, 投資, 技術 등 4개분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표준, 통관, 투자분야는 미국이 제기한 분야이며, 기술분야는 우리측이 제기한 분야였다. 이들 4개분야중 표준과 통관분야는 PEI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채택된 양국 공동 권고안의 이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투자 및 기술분야에서는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바라고 있어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PEI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양국은 新政府 출범이후에도 PEI와 유사한 형태의 경제협력 및 대화기구를 만들자는 데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3년 7월에 개최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1년을 기한으로 DEC의 추진이 합의되었다. DEC의 주요목적은 양국이 경제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제도 개선과 경제협력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화를 통해 양국간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있게 논의하는 경로를 마련함에 있다. 개별 현안별 협상방식이 특정업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대결적이고 첨예한 통상마찰로 비화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3차례에 걸친 DEC회의에서는 미국측이 제기한 投資, 行政節次, 租稅, 競爭政策, 通關, 金融規制緩和 등 6개분야와 한국이 제기한 社會保障稅 免除, 産業協力, 技術協力, 勞動, 建設, 相互認證 등 6개

과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경쟁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1년의 기한으로 운영되어 오던 DEC는 금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韓·美 經濟協議會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韓·美 양국은 DEC에서 협의된 결과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DEC 후속협의체 형태로 DEC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의명칭은 「DEC Implementation」 회의로 하고 협의대상, 주제 및 회의빈도도 기존 DEC보다는 축소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주요의제는 경쟁정책, 조세, 행정절차 등의 분야가 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그간 DEC에서 주요 관심사안으로 논의되었던 投資, 金融 등의 분야가 한·미 쌍무간 협의대상에서 이제는 우리의 '96년 OECD가입과 관련 OECD 다자채널을 통해 다루어질 전망이다. 미측입장에서 볼 때 가장 국제화·개방화의 진도가 느리다고 생각되는 이들 분야를 OECD 가입요건에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投資 및 金融

미국은 自國企業의 한국내 영업활동상의 애로사항이 우리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한·미간 쌍무적 협의의제 가운데 투자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측의 통상압력에 관계없이 투자분야는 국제화·선진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금

년 1월 「外國人投資誘致企劃團」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각종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참여하에 수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의견교환을 통해 「外國人投資環境改善 綜合對策」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96년 OECD가입전에 OECD회원국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이며, One-Stop Service체제의 구축 등 외국인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혜택은 물론 광주, 천안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外國人專用工團을 장기저리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측은 이러한 우리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 대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싱가포르, 태국 등 우리의 여타 경쟁국에 비해서는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비판도 곁들이고 있다. 최근들어 외국인투자가 전년동기에 비해 6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국내경제사정이 호전되어 가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외국인투자의 획기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거시적 견지에서 우리 경제의 安定的 成長과 함께 國際化를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정부내 「經濟國際化企劃團」의 제도개선작업을 통한 지속적인 국제화·개방화 작업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金融分野에 있어서 미측은 한·미금융정책회, UR 금융부문협상 등을 통해 '93년 7월 발표된 금융자유화 Blueprint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자유화 폭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측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금융기관의 영업상의 자유화 폭을 넓히고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국기업의 금융조달여건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보면 금리자유화의 조기 실시, 외환거래의 실수

요증빙 철폐 및 외환포지션한도 인상 등 외환자유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상업차관 도입허용, 연지급 수입기간 확대, CD 발행 한도 및 만기확대, 신탁의 통안채 강제인수 폐지 등 외은의 원화자금조달 관련 사항 등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금융부문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96년 OECD가입을 추진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金融部門의 國際化·開放化가 시급한 실정이다.

(3) 産業技術協力

한·미 양국은 교역, 투자, 기술면에서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미국의 첨단 기술과 우리의 제조기술을 상호 접목할 경우 양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여지가 크다. 따라서 한·미 통상관계를 종전의 通商摩擦解消라는 소극적 차원으로부터 상호 경쟁력을 보완하는 産業技術協力 차원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금년 4월에 韓·美 産業技術協力 방안을 제안하였고 현재 양국간 협력사업을 다각도로 추진중에 있다.

한·미간 주요 산업기술협력사업의 하나로써 양국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양국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업계 공동의 「産業技術協力 共同委員會」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는 이 위원회 산하에 항공, 자동차, 반도체 등 9개 업종별 協議會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산업기술 협력사업으로서 양국기업간 합작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대미 기술도입에 대한 용자지원을 위해 양국간 「産業協力基金」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측은 '97년까지 2천만달러 이상을 조성한다는 목

표 아래 현재 400만달러를 조성하였고 현재 미측도 기금조성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양국간 기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 10월 韓·美 技術市場(Technomart)의 개최에 이어 금년 11월 서울에서 제2회 기술시장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4) 其他 個別懸案

최근의 개별현안으로는 知的財産權, 自動車, 소세지 등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知的財産權(IPR)의 경우 양국간 합의사항의 이행 미흡이 쟁점이 되어온 바, 미 업계의 불만이 비등하여 '93년의 경우 스페셜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이 유력시되었으나 정부의 집중적 노력의 전개로 우선감시대상국(PWL) 지정에 그치게 되었다. 당초 한·미 IPR협상은 '86년 301조 협상에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 저작권에 관한 UCC 및 제네바 음반조약가입,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정, 미시판 특허제품(pipeline product)에 대한 소급보호 인정, 출판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절차에 의한 소급보호 인정(각각 10년 및 5년) 및 음반, 비디오에 대한 현행법의 엄격한 집행에 의한 소급보호 인정 등이 합의된 바 있다. 또 '89년 스페셜 301조 협상에서는 기 합의사항의 이행문제와 함께 반도체 칩, 영업비밀 등 새로운 분야의 보호입법, IPR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문제 등이 주 협상의제가 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89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하향지정된 이후 '90~'91년간 계속 WL로 잔류하였으나 '92년 PWL로 상향지정되면서 분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즉, IPR 법령의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 바, '93년에는 우선협상대

상국(PFC)으로의 지정이 유력시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IPR 침해사범에 대한 검찰 중심의 철저한 단속, 이를 위한 예비비의 신규배정, 국제관례를 반영한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관세법의 개정 추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의 전환 등 IPR 보호 노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93년 PWL로 잔류하고 이는 '94년에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미측은 우리의 IPR 보호 노력을 반영, 조만간 양국간 협의를 거쳐 WL로의 하향조정을 시사하고 있다.

미측의 압력여부에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IPR를 보호하는 분위기는 정착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예를 들어 유사상표가 문제되는 것은 품질이 매우 유사하면서도 고유의 브랜드를 갖지 못하고 외국의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결국 技術面에서 선진국과 어느 정도 접근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아래서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고유의 독자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홍콩의 경우 한때 세계적인 모방상품의 메카였으나 기업들이 이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홍콩 정청 당국도 단속 및 제도개선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모조상품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우리의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동남아의 6배, 중국의 10배 수준에 달하게 된 바, 이러한 상황아래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개발의 촉진은 물론 선진국의 첨단, 고급기술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IPR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

에서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을 위해서도 철저한 IPR보호체제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단속의 강화 및 이를 위한 자금의 지원, 국내 법 제도를 UR협정에 일치시키도록 개정, 각종 교육 홍보의 강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한·미간 개별통상현안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自動車 문제이다. 미측은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공식, 비공식 무역장벽으로 인해 한·미간의 자동차 교역이 엄청난 不均衡('93년 대 미수출 11만대, 수입 1,300대) 상태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미 자동차 3社의 경쟁력 회복을 바탕으로 수출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시장이 80년대 중반이후 매년 연평균 30% 이상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미측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세가지인데, 먼저 消費者들의 認識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한국내 소비자들이 외제 승용차를 구매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關稅다. 현 자동차관세율은 10%로 EC와 같은 수준이나 미국의 2.5%보다 높으며 한국의 평균관세율 7.9%보다도 높는데 이는 자동차의 대규모 수출국으로서('93년 총 64만대 수출, 2,000대 수입) 아직도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제로 배기량과 연동된 각종 稅制이다. 특소세, 부가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지하철 공채매입 의무 등 총 7가지의 세금이 TAX ON

TAX 형태로 부과되고 있어 사실상 대형차 위주로 되어 있는 수입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 10%보다 훨씬 높은 약 20~30%의 가격상의 불리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미측은 이러한 시장접근상의 불균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수입자동차 관세율을 우리의 평균관세율인 8% 수준으로 2% 포인트 하향조정할 의사가 있으며, 현행 7천만원 이상의 차량 구입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취득세율을 2%로 낮춘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통상정책이 결과지향적 수량목표치에 기저를 두고 있는 한 수입자동차와 관련된 통상압력은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다음 소세지와 관련해서 최근 제기된 문제는 '90년 이후 90일간의 유통기한을 적용받던 미국산 가열소세지에 대해 보사부가 지난 3월 流通期限을 30일로 판정, 유통중인 제품의 판매금지 및 通關保留措置를 취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그 결과 '94년 2월 27일~3월 14일 사이에 수입 신고된 122.5만달러 상당 35개 컨테이너분의 소세지가 부산항에 억류되었다. 미측은 동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수퍼 301조 발동을 포함한 양자적·다자적 강경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측 입장을 보면 소세지관련 현행 한국측의 위생기준은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바, 가열소세지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냉동 유통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유통기한은 최소 90일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측 기준인 냉장상태에서의 30일은 미국으로부터의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사실상 봉쇄되는데, 이는 '89년 수퍼 301조 농산물분야 합의사항인 “소세지에 대해 '90년 1월부터 아무런 제한없이(without restriction) 수입자유화한다”는 데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미측은 GATT제소를 추진중에 있는데 이미 지난 5월중에 GATT기술장벽위원회 및 본회의에 동 사항을 회람시키고 미국내 관련업체에 이로 인한 피해보고 요청을 하였으며, 장차 수퍼 301조 발동에 따른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 保健當局의 입장은 현행 우리 식품안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며, 식품안전규정상의 소세지 유통기한문제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될 경우 이에 대한 한·미간 협의에 응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금년 7월경 한·미간 식품안전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4. 多者間 긴밀한 協助圖謀

(1) UR協定과 WTO體制

한·미 양국은 한국이 처음으로 협상의 전 분야에 걸쳐 참여한 UR協商에서 분야별로 대립과 협조의 과정을 밟아왔다. 그 결과 우리도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또는 개도국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반영코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대립 또는 공조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農産物分野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에 대항하여 일본, 스위스, 멕시코 등과 함께 非交易的 關心品目的 개념을 내세워 대립하였다. 그 결과 관세화 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확보하고 最小市場接近 물량을 여타 국가보다 특별히 적게 인정받는 등 그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연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國別履行計劃書(C/S)의 제출과 관련, 수정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져 많은 물의가 빚어졌다. 돌이켜 보면 당초 우리와 입장을 같이 했던 일본, 스위스 등은 이미 예외없는 關稅化가 원칙의 문제로서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얻는 카드로써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우리는 국내적으로 절대 쌀만은 지키겠다는 명분에 밀려 결국 C/S제출시 관세, 국영무역 등의 조건에서 이득을 더 얻어보고자 하였으나 당초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대내적으로 예외없는 관세화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했으므로 관세화를 전제로 한 각종 조건을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대외적으로는 당초 약속과 달리 C/S를 변경한 꼴이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C/S를 수정한 모양이 되어 큰 물의가 야기되었던 것이다. 결국 C/S검증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모양으로 비쳐져 국제적으로 한국의 信賴性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UR의 타결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막연한 회색조치의 발동요건이 엄격해지고 301조 등 일방조치도 WTO紛爭解決節次로 대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관세인하에 따라 세계교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밀고 나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우리에게 여러가지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NAFTA, EU 등 지역주의적 경향이 확산됨으로써 우리와 같은 역외국가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는 데도 多者間體制는

큰 역할을 한다. 다자간체제는 이와같이 지역주의, 쌍무적 압력 및 일방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바, 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자세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첫째, 多者間 規範의 논의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UR의 경우 이미 '86년 이전부터 미, 일, EC 등 주요 국가간에 서비스, 투자, IPR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UR타결 이후 벌써 미국 주도로 NEXT ROUND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경, 경쟁정책, 노동, 투자, 기술 등 제 분야의 각종 논의에 처음부터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적극 주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OECD가입은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다자간 규범은 대체로 선진국간의 클럽인 OECD에서 먼저 논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NEXT ROUND의 주요 의제가 될 환경, 경쟁정책, 노동, 투자 등이 이미 OECD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國家間의 聯合努力을 기울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UR農産物 분야에서 한국, 일본, 스위스, 멕시코 등이 같은 입장을 내세웠듯이 동일 처지에 있는 국가간의 사전조율 등 평소에 제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간체제가 주는 장점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內部體制의 整備가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WTO체제 안에서 보조금분야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각종 산업지원제도의 틀을 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다자간체제의 혜택은 그 체제가 요구하는 규범과 산업경

쟁력을 갖춘 국가에게 최대한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직까지 세계 경제질서 창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 地域主義 관련 兩國關係

地域主義와 관련한 양국의 통상관계는 주로 APEC과 NAFT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PEC과 관련해서는 APEC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경제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역내국가간 경제의존도도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이해관계가 유럽쪽에 비해 더 큰 상황으로까지 진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결속력이 강화된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내에는 아세안과 같이 미국과의 교역관계가 그다지 밀접하지 않은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한국, 일본, 대만 등처럼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대단히 큰 국가도 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아세안 사이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 명백한 태도를 보류하고 있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내에 결속력이 강화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개별 발전의 격차가 매우 큰 점을 감안, 일단은 소위 開放의 地域主義를 표방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규모 및 발전단계에서 中間者的 위치(MIDDLE POWER)에 있는 한국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잇점을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어 미이 貿易投資委員會(CTI)의 의장국으로 피선된 바, 동 위원회가 중심의제로 다룰 예정인 통관, 표준 등의 사항은 한·미간 PEI를 통해 이미 우리 제도개선을 완료한 분야이므로 우

리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이 여타 APEC 국가의 제도개선을 통한 우리기업의 보다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地域主義 관련 한·미간에 또다른 관심분야는 한국의 NAFTA가입, 또는 한·미간의 自由貿易協定(FTA) 체결문제이다.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의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에서의 자유화수준 미흡으로 현 상태에서 한국의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입장에서도 UR보다 여러 면에서 폭넓은 自由化를 규정하고 있는 NAFTA에 가입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短期的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겠다. 다만 長期的으로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 및 중국의 역할 증대, 한·미 양국간 첨단기술 및 자본과 생산기술 등 상호보완적 요소, 역사적 우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戰略的인 측면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5. 向後韓·美經濟關係 展望

'89년 이래 한·미 양국간 交易規模는 정태상태이나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제1위 교역상대국(한국은 미국의 제8위 교역상대국)으로서 주요한 협력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또한 投資 및 技術 도입면에 있어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의 경제협력관계의 비중은 여전히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미국과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우리 경제의 계속적인 주요 對外政策課題의 하나가 되고 있다. 더우기 국제경제 환경은 바야흐로 WTO라는 새로운 자유무역질서가 창달되는 한편 EU, NAFTA 등 지역주의적 성향도 대두되고 있는바, 이러

한 세계경제질서 변화속에서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國際化·開放化를 추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방안도 조심스럽게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간 雙務的 通商關係를 종합해 보면 향후 한·미 관계는 대체적으로 원만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표 2〉 美國의 對韓投資金額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總投資(A)		美國投資(B)		比重(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2~'81	399	266	110	120	27.5	45.1
'72~'81	1,118	1,160	145	371	12.9	23.2
'82~'91	2,255	7,404	631	2,059	28.0	27.8
'92	236	894	70	379	29.6	42.4
'93	278	1,044	68	341	24.2	32.7

〈표 3〉 對美 技術導入 現況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技術導入件數			技術料支給額		
	총계	미국	비중	총계	미국	비중
'62~'81	1,997	466	23.3	565	188.8	33.4
'82~'86	2,078	515	24.8	1,184.9	602.7	50.9
'87~'91	3,471	1,010	29.1	4,359.3	2,121.9	48.7
'92	533	163	30.6	850.6	452.3	53.2
'93	707	224	31.7	945.8	418.1	44.2
계	8,766	2,378	27.1	7,905.7	3,783.6	47.9

貿易收支의 均衡狀態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빨리 회복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재지, 투자, 자동차 등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기업의 일상적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마찰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양국간의 교역관계가 커지고 다양화되는 데서 오는 피할 수 없는 것인만큼 이를 얼마나 관리가능한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미간의 쟁점이 될 사항들에 대해 검토해 보면 대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내의 것으로 판단된다. 즉, IPR

의 경우 우리 제도를 國際基準에 일치시킬 예정이므로 쟁점이 될 소지가 줄었고 금융의 경우에도 OECD가입이 예정되어 있어 어차피 經常外 貿易 및 資本計定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 분야가 한·미간의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남은 것은 通關, 국내기업활동에서의 政府規制 등인데 이들 분야도 규제완화 작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의 한·미 관계는 관리가능한 범위내에 있다고 하겠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미국은 輸出增大를 통한 자국의 경제문제 해결에 목표를 두고 미국에 유리한 교역·투자환경을 확보하고자 다각적인 통상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미국의 보호주의적이며 일방적인 통상정책수단은 주로 일본, 중국 등 대규모 對美黑字國을 대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PEI와 DEC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한·미 통상관계를 개별 통상현안의 해결차원이 아닌 보다 광범위하고 제도개선적 경제협력차원으로 이해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맹관계로 강화시켜 나간다면 한·미 경제관계는 전반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문제와 같은 개별 통상현안은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며 金融自律化, 投資開放, 知的財產權 보호와 같은 각종 2차적 장벽을 둘러싼 마찰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우리의 각종 법, 제도, 관행을 계속적으로 국제화시켜 나가고 한·미간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대화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해시킨다면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